

자가격리 수칙 어긴 환자 생활비지원 받을 수 있나

격리지 이탈해 20번 감염시킨 15번...정부 '벌금 300만원' 고발 협의중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15번 환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20번 환자도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지 관심이 쏠린다. 이에 따라 이들이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6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수원시 정안구 천전동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한 20번 환자는 지난 1일 같은 건물 4층에 사는 형부인 15번 환자와 3층 본인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이 지리엔 다른 가족들도 있었다.

15번 환자는 4번 환자(55·남)와 중국 우한시에서 같은 비행기로 1월20일 입국했다. 이후 4번 환자가 1월27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5번 환자도 29일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런데 15번 환자는 자가격리 상태에 있던 2월1일 처제와 식사를 함께 했고 다음 날인 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처제는 곧바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5일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돼 20번째 환자가 됐다.

현재 관할 보건소는 15번 환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지침 위반시 내리는 벌금 300만원 이하 부과에 대해 검토 중이다. 15번 환자가 감염 예방을 위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겼기 때문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14일 "고발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번 환자는 앞으로 법 위반이 결정되면, 정부가 자가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15번 환자가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지, 안할 지는 아직 모르지만 원칙적으로 생활지원비는 격리생활 수칙을 충실히 이행했을 때 지급된다"고 말했다.

생활비 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다만 20번 환자의 경우 15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함께 식

사한 점, 또 20번 환자가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던 만큼 당국은 이 환자에 대한 생활비지원은 가능할 수 있다고 봤다. 중수본 관계자는 "20번 환자의 경우 자가격리가 된 시점부터 수칙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잘 지켰다면 생활비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20번 환자 역시 부주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건물 위아래 층에 살고 있어 형부가 자가격리자(잠재적 환자)라는 점을 식사전 인지했을 것이라 얘기다. 물론 전혀 몰랐을 수 있고,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자라 심각성을 간과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당국은 "지자체와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반복했다.

한편 정부는 17일부터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격리자의 경우 1인가구 기준 1달 45만4900원, 4인가구 기준 123만원을 지원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뉴스1



눈 내리는 거리 눈이 내린 16일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찾은 관광객들이 우산을 쓰고 눈 내리는 거리를 걷고 있다.

인권위, 교도소 수감자도 헤어스타일 유지 권리有

국가인권위원회가 수감자에게 위생을 이유로 짧은 머리로 이발할 것을 강요하는 교도소 방침을 재차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교와 수감시설, 군대 등 두 발 규정이 존재하는 기관과 시설에 지속해서 과도한 제한을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인권위는 최근 위생상 문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감자의 자유의사에 반해 이발이 실시되는 일이 없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A교도소 소장에게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광고·사진업에 종사하는 B씨는 직업상 머리를 자르는 것이 곤란했으나 지난해 7월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의 강권으로 아쩔 수 없이 자르게 됐으며 가족을 통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머리를 자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계속해 표현했으나 교도관이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발을 했다고 주장했다.

교도소 측은 B씨의 머리가 다른 수용자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위생상 이유로 이발을 권유했으며, B씨도 크게 반발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수용자로 하여금 신체와 의료를 위생적하게 관리하도록 할 필요성은 공감된다"면서도 "과도하게 수용자의 외형에 대한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2005년 '학생들의 두발 자유는 기본권'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뒤로 사회 곳곳에서 제한되고 있는 두발 자유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연세과 파마 등을 제한하는 인천 지역 중학교의 생활 규정에도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지역 교육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두발에 있어서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과도한 제한을 금지하는 인권위의 기준은 군대에도 적용됐다.

인권위는 최근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이 훈련병들의 머리를 두피가 드러날 정도로 짧게 '삭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

● 단신 ● 생후 80여일 된 아기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광주 한 아파트에서 생후 80여일 정도 된 아기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전 9시50분쯤 광주 남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80여일 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 당시 아기는 옆으로 누운 상태로 숨을 쉬지 않았고 출동한 구조대원이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기가 전날부터 뒤집기를 시작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은행 창문 깨고 금품 훔치려다 미수그친 70대

은행 창문을 둔기로 깨고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7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6일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A씨(70대 남성)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55분쯤 A씨는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은행 출입구 옆 창문을 둔기로 깨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했으나 잡히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비업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은행에서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도주하려던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가 가지고 있던 가방 안에는 면장갑과 둔기 등 범행도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화배우, 친동생 이름으로 프로포폴 상습 투약"

유명 영화배우가 친동생의 이름을 사용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이 나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5일 채널A '뉴스A'는 검찰이 유명 영화배우, 재벌가 자녀 등의 프로포폴 불법 상습 투약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영화배우 A씨가 친동생의 이름으로 투약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뉴스A'는 A씨가 한 병원에서 차명을 사용해 프로포폴을 투약했으며, 사용한 이름 중에는 배우 출신인 친동생 이름도 있다고 했다. 수년간 적게는 10차례 이상의 투약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 기업 전 대표 B씨도 A씨의 친동생 이름을 써서 프로포폴을 투약, 검찰이 이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차명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정황이 포착된 이들 2명을 비롯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불법 투약한 사람이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음주 운전자 도주하다 차량 5대 충돌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가다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44분쯤 부산 사하구 괴정동의 한 모퉁이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두산 운전자 A씨(30대 남성)는 시민이 자신을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고 도주하다 골목길에 세워진 스포카 등 차량 5대를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량과 충돌한 뒤 멈춰선 A씨 차량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화조 청소

깨끗한 물, 자연과 함께 하는 기업

노령미화사

금성미화사

061)393-3200

061)394-3200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환경법에 의해 청소해야 되며, 미 청소시엔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